

유시민의 정직함이 한계가 되는 지점

2026.2.4. 이상연

유시민은 민주주의를 미화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고 비용이 든다”, “정당정치·대의제의 현실은 불편하지만 그것이 기본값이다”라는 식으로, 대중이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정면으로 말했다. 허불제 민주주의가 사랑받은 이유도 거기 있다. 말하자면 그는 대표제가 최선이었던 시대의 민주주의를 가장 정직하게 해설한 사람 중 하나다. 문제는 바로 그 정직함이, 이제는 “안전한 설명”이 되어버린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이유가 더 이상 “시민이 덜 성숙해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명 조건 자체가 바뀌고 있다. 대표제가 작동하던 전제들이 빠르게 붕괴하고 있는데, 유시민의 프레임은 그 붕괴를 끝까지 사유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1) 대표제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표제를 “기본값”으로 고정한다

유시민의 모델에서 시민은 대체로 ‘결정자’라기보다 ‘심판자’에 가깝다. 시민의 역할은 공론장에 참여하고 정보를 습득한 다음, 선거에서 평가하고 교체하는 것이다. 이 구조는 대의 민주주의의 정석이다. 하지만 전환기에는 이 정석이 약점이 된다.

왜냐하면 오늘의 권력은 선거 주기(4~5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 플랫폼은 매일 추천과 광고로 의제를 만들고, 자본은 규칙을 선점하고, 관료 조직은 재량과 해석으로 결과를 고정한다. 선거는 “사후 평가”인데, 포획은 “상시 진행”이다. 시민이 심판자로만 남아 있으면, 이미 판이 기울어진 뒤에 판정을 내리는 꼴이 된다.

공주민제가 대표제 “폐기”를 먼저 외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대표자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위임이 지나치게 두꺼워진 구조를 얇게 만들어 시민이 특정 영역에서는 실질 결정권(룰·귀속·감사)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문명 조건: 플랫폼·알고리즘·노동-자본의 붕괴

유시민은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시민의 덕(책임, 합리성, 공적 윤리)’을 강조한다. 그 자체는 맞다. 다만 지금은 덕만으로는 못 버틴다.

- 공론장 자체가 플랫폼에 의해 구조화된다. 여론은 속의가 아니라 “노출”이 만든다.
- 정치가 ‘정책’이 아니라 ‘주의(attention)’ 경쟁이 된다. 이 경쟁에서 돈과 데이터가 유리하다.
- 노동-임금-복지의 20세기 문법이 약해진다. 자동화·플랫폼화가 진행될수록 다수 시민은

임금 정치만으로 생존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조건에서 대표제는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권이 잠식되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 선거는 돌아가지만, 경제적 귀속과 규칙변경권은 계속 소수에 고정된다. 유시민의 민주주의 해설은 이 지점까지 가면 더 이상 “정직한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설계가 필요하다.

3) 블록체인·기술을 ‘보조’로 두는 태도의 함정

기술을 만능으로 보는 건 위험하다. 블록체인도 정치의 대체물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쪽 극단이다. 기술을 “투기·사기 담론”과 함께 통째로 경멸하면, 민주주의가 필요한 도구까지 같이 버린다.

전환기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기술은 “혁명 버튼”이 아니라 감사·기록·검증·귀속의 자동화다. 즉 “누가 어떤 규칙을 바꿨는지”, “이익이 어디로 흘렀는지”, “정책의 귀속 경로가 무엇인지”를 시민이 상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인프라다. 이건 ‘보조’일 수 있지만, 국가가 굴러가게 하는 도로·전기·회계처럼 사실상 핵심이다.

4) 공주민제의 결론: ‘좋은 시민’이 없어도 공화국이 포획되지 않게

유시민이 요구하는 “좋은 시민”은 계속 필요하다. 하지만 그걸 전제로 국가 시스템을 세우면, 시민이 피로해지고 정보 비대칭이 커지는 순간 포획이 들어온다. 그래서 공주민제는 이렇게 말한다.

- 시민을 선인(善人)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무관심·편향·선동·이해상충을 기본값으로 둔다.
- 그 대신 귀속 규칙을 바꾸고, 이를 변경권을 분산하고, 감사·투명성을 내장해 포획의 반복을 끊는다.
- 시민을 ‘심판자’에만 두지 않고, 최소한 핵심 영역에서는 공동 결정자로 올린다(상시 동원이 아니라 상시 가능).

이게 급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목적은 급진이 아니다. 목적은 보수적이다. 민주공화국을 생존시키는 것, 정권교체의 성취가 플랫폼·자본·관료 포획에 의해 무력화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래서 공주민제는 “가치의 과격함”이 아니라 “시스템의 안전공학”에 가깝다.

맺음말: 유시민을 넘어야 유시민이 지키려던 민주주의가 산다

유시민의 공로는 크다. 그가 만든 언어는 민주주의자들을 냉소가 아니라 책임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이제 필요한 건 “정직한 설명”에 더해 “정직한 설계”다. 대표제가 최선이었던 시대의 해설자가 남긴 지점을 딛고, 대표제가 무력화되는 문명 조건에서 주권을 다시 실체화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공주민제가 유시민을 비판하는 이유이자, 동시에 유시민을 “버리지 않는” 방식이다.